

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기권이 논란에 개입하면서 공론화는 진보 대 보수 대결 양상을 띠게 됐고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차분한 논의는 더 어려워졌다.

신고리 5·6호기 계속 건설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등은 '전력 대란', '전기료 폭탄', '국가적 자해행위'라는 강한 어조로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건설 중단을 주장한 환경단체는 영화 '판도라'의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탈원전 정책 홍보를 본격화했다.

찬반 양측 모두 다양한 논리를 내세웠다. 신고리 건설 찬성 측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당장은 원전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늘면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건설 중단이 국내 원자력 업계 쇠퇴로 이어져 원전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 반대 측은 대규모 지진이 한반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주 지진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영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사회적 비용과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원전보다 저렴하며, 원전 감축을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반 시민들은 양측 주장을 경청하고 질문하며 숙고했다. 전화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500명의 시민참여단 중 471명이 오리엔테이션과 2박3일 종합토론회를 포함한 33일간의 숙의 과정에 끝까지 참여했다.

시민참여단 1조 서은경 씨는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종료 후 발간한 백서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강연과 토의라는 뻑뻑한 일정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두 (신고리 문제에) 집중을 했다는 점"이라고 기록했다.

■ 건설 재개 확정...후속조치 신속 추진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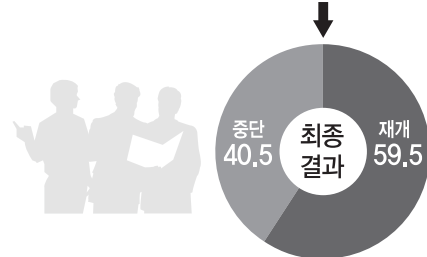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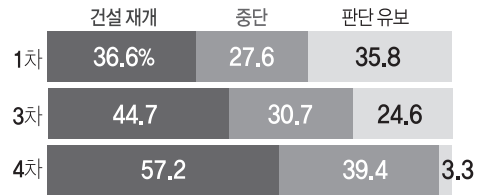
2017년 10월 20일 471명의 '작은 대한민국'이 내린 결론은 '건설 재개'였다. 재개(59.5%)하라는 의견이 중단(40.5%)보다 19%포인트 많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며 보완조치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한 마련 등을 권고했다. 짓고 있던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마치고 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된 원전의 점진적 축소 정책을 계속 추진하라는 권고안은 탈원전 찬반 진영 모두에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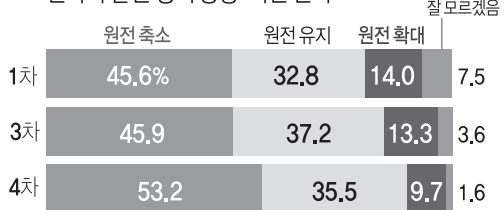
무엇보다 공론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대화로 풀어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김 위원장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현자(賢者)라고 불리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 3조의 왕수빈씨는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점을 두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해 본 2박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의견 추이

- 2차 조사는 관련 문항 없어 제외
- 최종은 4차 조사에서 판단 유보를 제외한 재개·중단 양자택일 결과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 의견 변화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일 동안 우리는 충분히 다른 의견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백서에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공사는 10월 25일 0시부터 다시 시작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 7개월간 선체 수색...4명 유해 찾아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침몰 해역에서 인양돼 2017년 4월 1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참사일로부터 1천91일 만이자 2015년 8월 7일 인양작업에 착수한 지 613일 만이었다.

세월호는 길이 145m, 폭 22m, 6천825급으로 국내에 운항하는 여객선 중 최대 규모였다. 사고 당시 승객 총 476명 중에서 172명이 구조됐고 299명이 사망했다. 5명은 미수습자로 남아 있다.



▲ 4월 11일 오전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인양을 시작하고 두 번의 겨울을 넘긴 끝에 2017년 3월 22일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 날 잣깡바 지선과 도르래의 접촉 문제를 해결하고 인양에 걸림돌이었던 선미의 자동차 출입문(램프)을 절단하고 나서야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졌다. 이후 선체에 구멍을 뚫어 무게를 줄이는 등의 작업을 거쳐 인양을 마무리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된 이후 수색 당국은 그때까지의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해 객실과 화물칸, 침몰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7개월간의 수색으로 객실과 침몰 해역에서 단원고의 조은화·허다운 양과 고창석 교사, 이영숙 씨 등 4명의 유해가 일부 수습돼 장례가 치러졌다. 이들을 끝으로 수색에 더 진척이 없자 남은 미수습자 유가족들은 2017년 11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유해 없는 장례'를 치렀다.

수색 과정에서는 세월호를 목포신항으로 옮기던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 위에서 동물 뺨조각이 잇따라 발견돼 가족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또 이영숙 씨로 확인된 유해를 유가족들이 모두 떠난 뒤에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보고해 오후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작업은 2017년 12월 일시 중단됐으며, 2018년 3월 선체를 바로 세운 뒤 수색 인력이 안전하게 들어갈 환경이 확보되면 참사 원인 규명 및 남은 미수습자를 찾는 추가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

세월호가 3년 만에 육지로 옮겨지고 7개월간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5명은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남은 미수습자는 단원고 2학년 박영인·남현철 군, 단원고 양승진(사고 당시 59세) 교사, 부자 사이인 권재근(사고 당시 51세) 씨와 권혁규(사고 당시 7세) 군이다.

2남 중 막내인 박영인 군은 성격이 발랄하고 쾌활해 부모님에게 딸 같은 아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 운동이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했다. 영인 군과 같은 반이었던 남현철 군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며 5반 고(故) 이다운 군의 자작곡 '사랑하는 그대여'를 작사했다. 가족들은 팽목항에 현철 군이 아끼던 기타를 세워두

고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양승진 교사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듬직한 선생님이었다. 사고 당일 선체가 기울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제자에게 벗어주고 학생들이 있는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3년 만에 세월호가 물 위로 첫 모습을 드러내던 날은 양 교사와 아내 유백형 씨의 33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군은 온 가족이 제주도로 이사를 하던 길에 슬픈 이별을 하게 됐다. 막내딸은 사고 당시 구조됐고 베트남 출신인 권 씨의 아내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평소 한 살 어린 여동생을 끔찍이 아낀 혁규 군은 사고 당시 어머니를 도와 여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8·2 부동산 종합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 '투기와의 전쟁' 8·2 부동산대책 발표

2017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강한 규제책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부임한 김현미 장관은 6월 23일 취임식에서 "집값 급등은 다 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투기세력에 선전포고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극지적인 불안이 계속됐고 정부는 8월 2일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8월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됐다. 이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되는 '규제종합세트'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 정부는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후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찬 서울 강남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